

## 社會改革으로의 길과 入試競爭 문제

金 河 秀

(延世大 國語國文學科)

### 1. 공허한 개혁에서 實踐의 改革으로

각계 각종 국민들이 현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희망과 의구심이 교차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 희망의 원천은 지나간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그러한 군사 독재의 피해자였다는 점과 그가 취임 이후 과거의 군 출신 통치자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면을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많이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의구심은 구체적으로 현 정권의 핵심부가 과거에 온갖 비리와 잘못된 정치를 저질러왔던 수구 세력과 결별이 아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자신감 결여도 이러한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을 것이다. 곧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슬한 문제점들은 어제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5·16부터 멀리는 광복후 정부 수립, 더 멀리 가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싹트고 뿌리박은 것이 무수한데, 혁명이 아닌 정권 인수 차원에서 과연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허무주의도 무시

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앞날에 대한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육 문제에 관한 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록 막연하나마 '교육'의 중요성에 매우 우선적인 가치를 두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공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 정권의 전교조 문제 처리 방식은 앞으로의 교육 문제 해결 노력이 결코 근본적인 개혁으로 치솟지 못하고 대중요법적 개선이나 어중간한 부분 개혁에서 멈출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준 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정치구조의 비합리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많은 시사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듯이 현재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제도적 개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인간적 보복이나 권력의 집중화 수준에서 뱀도는 감이 없지 않다. 아무리 그들이 개혁을 외친다 하여도 그 개혁의 실상이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는 개혁의 주체들조차 신문담만 되뇌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개혁이라는 것의 전망을 의심스럽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과연—근본적이나 개혁적이나를 둘째로 치고서라도—현재의 이른바 개혁 주도세력의 구호가 무언가의 개혁을 노린 것인가 아니면 그저 정권 장악과 지배세력 내의 패권다툼을 위한 노련한 선전술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권에 들어와서 저질러지는 각종의 언어적 조작은 그 이전 시기의 언어 사용 전략의 수준을 상당히 능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도 하루하루 국민의 귓전을 울리는 온갖 정치적 담화가 정치 행위를 위한 정보 교류가 아닌 의식 조종 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문민’이라는 어휘의 개념부터가 이상야릇한 점을 스스로 품고 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군 출신이 아니라는 요소와 국민 또는 일반 대중이라는 요소가 어정쩡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간인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시민층이라는 개념도 아니어서 그냥 막연하게 현 정권을 새롭고 산뜻하다는 뜻이 꾸며만 주고 있다. 이러한 언어 조작의 전형적인 예로 ‘쿠데타적인 사건’이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평범한 어휘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분화시켜 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될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말장난은 “역사에 맡기자.”는 논리이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역사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포기권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문제로 말미암았던 희생과 고통 역시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싹튼 갈등과 대립도 여전히 내면화된 채로 유지될 것이다. 결국 역사에 맡기자고 외치는 행위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유지시키되 제발 외면화시키지만 말자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산 가족의 재회를 역사에 맡기자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단념하라는 실천적 의미밖에 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입시경쟁에 관한 문제를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또 한번 믿고 맡겨 보자는 식

의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 버릴 위험성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는 아무리 비민주적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상 더 지나쳐 버릴 수 없이 교육계의 염증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과,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국민 모두가 각성하여 우물쭈물하는 정권의 뒤를 추동해서라도 입시 제도의 개혁을 ‘역사에만 맡겨 버릴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나간 날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정권의 위기나 사회적 불안 등의 정치적 고비가 닥칠 때마다 교육 제도, 특히 대학 입시 제도를 미봉적으로 손질하여 대중의 불만을 얼렁뚱땅 달래온 것이 사실이다. 문민을 내세우는 현 정권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가 닥친다면 과거의 이러한 정치 조작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조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오로지 전문가 집단이 일반 대중과 함께하는 인식의 결합을 이루어 오도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 주는 나침반의 구실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 2. 學生 선발과 競爭 체제

입시 제도, 특히 대학 입시를 두고 논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떨치지 못하는 일종의 상식화된 미신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학생을 선발하는 일’과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일’을 동일시하는 현상이다. 일핏 보면 쉽사리 구분이 안 되면서도 사실 그 두 개념 사이에 놓인 관념의 틈은 무척 넓은 편이다.

학생 선발이라 함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나 교육 목표에 적합한 대상을 고르는 작업이다. 따라서 입학 희망자의 적성이나 학업 동기, 그리고(대학의 경우는) 해당 분야와 인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축적된 지식이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경쟁은 애당초 ‘서로 다른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사회에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곧 경쟁은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어 승리자에게는 이익을, 패배자에게는 이익에서의 배제와 더불어 그 패배를 자인토록 의식을 고착시키는 사회적 예식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에 온 국민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우상시더 배어달리는 것은 위에서 말한 '(공정한) 학생 선발'이라는 개념과 '사회적 이익의 분배'라는 상이한 개념이 교묘하게 접쳐진 이중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학생 선발 행위가 얼마나 적합하게 이루어졌느냐보다 공정성 여부, 합격선의 높낮이, 특별 전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등의 주변적 요소에 모든 관심사를 집중하게 유도하고 있다.

물론 경쟁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차별성 있게 측정한다든지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나누어 맡긴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면, 곧 일종의 바람직한 경쟁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경쟁이 진정 바람직한 일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합한 학생 선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고 경쟁 그 자체가 모든 가치를 압도해 버리는 상황속에서 이루어지는 무모한 경쟁은 적합한 학생 선발은커녕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한 환멸만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무모한 경쟁 아래에서는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부모의 극성, 부의 편재 등에 의하여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 양극화, 더 나아가 대학 수준의 양극화 등의 해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해악을 가져 올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의 교육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시시각각 좁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교육에 관한 의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교육기회가 사적 소유의 지배를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실태가 아닌가 한다.

### 3. 社會構造와의 관련성

종종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사

람들은 교육 정책의 난맥, 교육자들의 사기 저하, 예산 부족,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등을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인식은 우리의 상황과 구조를 각론화시키기에는 편리하지만 전체의 핵심을 총론적으로 다루기에는 역부족인 논리이다. 오히려 이렇게 파편화된 인식 자체가 교육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아닌가 하는 반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기형성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의 결핍에서부터 짚어 보아야 한다. 의무 교육 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사립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립 학교에 비해서 우리의 사립 학교는 훨씬 원시적인 사적 소유의 대상물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족벌 운영, 학교 재정의 사금고화, 자의적인 교원 인사 등으로 맘미암아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소한의 가치 체계나 도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광복 후에 어실르게 수행된 토지 개혁 과정에서 자산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배타적으로 확보하려던 토지 자본가들이 사립 학교를 마구잡이로 설립 하였던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교육 기관의 사적 소유 형태는 구조적으로 강화되었다. 더구나 교육을 통치 행위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는 독재 정권이 몇 대에 걸쳐 파행적인 행정으로 각급 교육 기관을 장악만 하려 했던 결과, 이제 우리의 교육 제도는 사립이나 공립이나를 막론하고 사회성을 찾아 보기 힘든 누추한 물골만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는 공·사립을 가릴 것 없이 사회 발전이나 지식 전수 등의 원론적인 교육론은 뒷전에 묻어 둔 채 국민의 관심사를 이리저리 둘러 가며 자신이나 자녀들의 이기적인 기회 잡기에 혈안이 되도록 하는 심리조작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자연히 기초 교육인 국민 학교 교육은 소홀히 되고 일종의 전문 교육기관인 대학만이 모든 교육 문제의 우선이자 핵심인

양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다가 오른 교육열 또는 진학열은 오히려 우리의 교육을 좀먹는 원흉으로 지적이 되면서 입시 정책은 마치 이러한 원흉들의 반교육적 행위와 대결하겠다는 듯이 조만석하게하기가 일쑤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케번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간파하기에는 자신들의 현실과 자녀들의 장래 문제에 너무도 예민해진 상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제 사회 개혁의 문제와 연관되어 교육 전반과 입시 경쟁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또 다시 시험 과목수, 배점, 본고사 실시 여부 등의 행정기교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 4. 入試 競爭의 원인과 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온 지나친 교육열 또는 진학열은 오히려 수험생이나 그 부모들만이 지어야 할 책임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반대로 자연발생적이라고도 또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교육열과 진학열이 과연 적절하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왔었는가 하는 문제와 오히려 이 문제를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그 부정적 산물을 즐기고 있는 구조는 없었는가로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과열 입시 경쟁은 지배 엘리트 공급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고위층의 인사 구조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느 대학 출신 인지를 꼽아 보는 일에 바쁜 작태가 이를 반증한다. 곧 사적인 인간 관계의 우선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도순은 지방 대학과 신설 대학의 발전을 논하면서 대학의 질적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시피 한 무수한 대학생을 다량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거꾸로 우리의 대학이 소수의 지배 엘리트를 공급하기 위한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방 대학이나 신설대학들(포항공대와 같은 특수한 의미의 대학은 제

외하고)은 우리 사회의 지배 구조에 등장하기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 출신들은 본인의 실적과는 관계 없이 거대한 擬似 엘리트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의사 엘리트들은 한편으로는 지배 엘리트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 구조적 패권을 강화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엘리트의 대중화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 꽤 널리 관철된 엘리트의 대중화는 지식인 노동의 저임금화를 불러 일으킨다. 지배 구조에서 소외된 다수의 擬似 엘리트들은 사회경제적 하위 직급의 직업 전선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저임금과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취약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일반 대중에게 고된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최소한 아무 대학이나 나와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불어 넣어 주고 이것이 또 치열한 입시 경쟁을 불붙인다. 종종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썩스러운 만큼 빈약한 시설과 교수진이 간신히 갖추어진 대학에, 수도권이거나 교통 편의 등의 교육과 관계 없는 조건이 유리할 경우에는 더욱, 놀랄 만한 입시 경쟁이 붙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구조적 측면은 자명해진다고 보겠다.

결국 우리 대학 입시의 근본 모순은 단순히 과열된 교육열이나 분수 모르는 진학열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부추겨지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여러 모순들이 교묘한 이중 구조를 통하여 국민 대중에게 또 하나의 정신적 육체적 질곡을 씌우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배 구조 강화와, 일반 대중이 지배 구조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항상 열린 듯이 보이는 상위 구조로의 위장된 상승 가능성(곧 대학 입시)으로 유혹하려는 위무 정책에 끊임없이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시달리는 형국을 빚어 내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사슬을 끊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황폐화와 그 부모들의 공황 상태는 결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 5. 새로운 길을 찾아서

과열된 입시 경쟁을 개혁한다는 일은 분명히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중차대한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또 다시 '입시 정책'이라는 비좁은 시각에서 다루게 된다면 또 부작용만 낳든가 아니면 개혁 아닌 표류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의 개혁은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입시제도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 사회의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입시지옥이라는 수수께끼는 영원한 미궁에 빠질 것이다.

입시 제도 개혁의 길은 그 개혁의 주체를 명확히 찾아내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 주체는 단순히 청와대나 교육부 당국일 수만은

없다. 대학 당국은 더군다나 아니다. 그 주체의 역할은 위에서 말한 정치 권력 기관이 지금까지 입시 제도에 현혹되었고 시달려 온 대중과 함께 담당해야 한다. 입시 문제와 연결된 온갖 욕구와 비애 그리고 방향 감각은 이러한 결합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곧 국민 대중과 함께 가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중과 함께 하는 길에서는 대학 졸업자와 전 문대 졸업자, 그리고 고교 졸업자의 사회적 기능이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분노가 개혁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받은 교육, 그들이 배운 지식이 삶 속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 보람 있는 것이 되어서 당당한 정신적 물질적 대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교육을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선진화시키는 새로운 길이 발견될 것이다. ■